

통신업체 이어 롯데카드까지… 대기업 해킹 ‘비상’

KT·LGU+, 정보유출 의혹
과기부 정밀 포렌식 진행 중
롯데카드 17일 지나 해킹인지
예산 축소 속 보안투자 한계

SK텔레콤이 지난 4월 해킹 피해로 사상 초유의 과징금 부과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도 해킹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같은 날 롯데카드에서도 해킹 사고가 확인돼 국내 기업·기관들의 사이버 침해에 대한 대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LG유플러스의 (해킹)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자료 제출을 통해 정밀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실제 사고가 확인될 경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글로벌 해킹 전문지 프랙 매거진(Phrack Magazine) 창간 40주년 기념호에 실린 보고서에서 비롯됐다. 지난달 8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해커 조지 김수키(Kimsuky) 서버에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기관으로부터 유출이 의심되는 정보가 발견됐다. 보고서에는 KT, LG유플러스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 외교부의 내부 메일 서버 소스코드 등이 포함된



물가상승률 9개월 만에 최저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로 지난해 동월 대비 1.7% 상승해 작년 11월(1.5%)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2일 서울 소재 유통매장에서 소비자들 쇼핑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뉴시스

데이터 8GB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T는 “침해 사실이 확인된 바 없으며 정부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LG유플러스도 “현재까지 특이 사항은 없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롯데카드에서도 해킹 침해가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2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에 최초 해킹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달 14일 오후 7시 21분 경이다. 이날과 15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이 이뤄졌다. 그러나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를 인

지한 시점은 지난달 31일 정오로, 사고 발생 후 17일이 지나서야 사태를 파악했다. 금융당국 신고는 이달 1일 이뤄졌다. 유출된 데이터 규모는 약 1.7기가바이트(GB)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버 침해사고는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고 건수는 2.2배 증가해 올 상반기만 1034건에 달한다. 과거에는 중소기업을 노린 해킹·협박이 주류였으나 최근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까지 공격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안투자와 인식 부족을 문제로 지적한다. 과기정통부와 KISA의 ‘2024년 정보

보호 공시현황’에 따르면 정보 보호 공시를 진행한 746개 기업의 평균 투자액은 29억원, 전담 인력은 10.5명으로 전년 대비 늘었지만, 28%의 기업들은 오히려 예산을 줄였다고 답해 여전히 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규 KISA 위협분석단장은 “사이버 침해 사고는 해당 기업들의 서비스 마비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들도 애꿎은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사이버 침해에 대비하기 위한 사후 조치뿐 아니라 사전 예방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5 물류&모빌리티포럼’ 모빌리티가 바꾸는 물류의 미래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주최하는 ‘물류&모빌리티 포럼’이 올해로 어느덧 10년을 맞이합니다. 그 사이 물류·모빌리티 산업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이동’이 공통분모인 이들 산업의 앞으로 10년은 더욱 빠르게 진화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더욱 스마트해지는 기술은 사람과 물건을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간과 공간 사이를 오고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연결’, ‘친환경’, ‘공존’, ‘안전’은 핵심이 될 것입니다.

10회를 맞는 올해 물류&모빌리티 포럼에선 ‘차량 그 이상의 플랫폼’이라는 의미로 세상에 선보인 기아자동차의 PBV(Platform Beyond Vehicle)의 탄생 배경과 혁신적인 제품이 그리는 현재와 미래를 제시하려 합니다. 사람의 라이프스타일과 기업의 비즈니스 그 중간을 공략하는 기아 PBV는 바로 물류와 모빌리티의 대표적인 융합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선 미래의 운송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 ‘뜨거운 감자’인 로보택시 등에 관한 인사이트도 함께 전달합니다..

- 주 제 : 모빌리티가 바꾸는 물류의 미래
- 일 시 : 2025년 9월24일(수) 14:00~17:00(내빈 티타임 13:4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문의·참가신청 : 2025 물류&모빌리티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metro®

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가결 46년만에 49층 대단지로 탈바꿈

서울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은지 46년 만에 최고 49층, 5893
세대의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1979년 준공 이후 46년이 지난 은마아파트는 현행 14층 442세대에서 49층 5893세대(공공주택 1090세대 포함) 규모로 탈바꿈한다.

은마아파트는 2015년 주민제안 당시 최고 50층 계획이 35층 높이 제한에 막혀 좌절된 바 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신속통합기획(패스트트랙) 방식에

따라 올해 1월 자문 신청 이후 8개월 만에 결정됐다. 이 방식은 별도 기획 설계 없이 전문가 집단 자문(3회 내외)을 거쳐 주민이 제안한 계획(안)을 다듬은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해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이번 재건축 계획에는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 공원과 400대 규모 공영주차장, 개방형 도서관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대치역 일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4만㎡ 규모 저류조도 설치된다. 단지 중앙에는 폭 20m 공보행통로를 신설해 은마~미도~양재천~개포동을 잇는 생활권 보행축을 확보한다.

/전지원 기자 jiw13@

“임금체불은 임금절도”… 상습 사업주 강력 제재

법정부 강력 근절대책 마련
감독대상 사업장 2배로 확대
악의적 체불면 공공지원 차단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임금체불을 ‘임금절도’이자 ‘중범죄’로 규정하며 법정부차원의 강력한 근절 대책을 내놴다.

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법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열고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보상받는 것은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체불 예방 △상습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구조적 취약점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1만5000곳에서 2만7000곳으로 2배 수준 확대하고, 재직자 익명 제보와 지자체·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도입한다. 추석 전에는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도산 기

업의 피해 노동자를 위해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현행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넓힌다.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10월 23일 시행)에 맞춰 신용제재·공공재정 지원 제한·명단 공개·출국 금지·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방안도 추진된다. 김 장관은 “한 번이라도 악의적 체불이 발생하면 정책자금 융자 등 공공 지원을 차단하겠다”고 못 박았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구조적 체불’을 정조준했다. 건설·조선 업종에는 임금 구분

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도입해 하도급 노동자의 임금 누수를 막고, 퇴직금 체불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법정형도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해 체불이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 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추석을 앞둔 6주간 ‘체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체불 SWAT’으로 불리는 전담 대응팀을 투입하고, 체불 변제 추적 전담센터도 가동한다.

/세종=한용수, 안승진 기자 hys@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로 여야 충돌…국힘 단체 퇴장 /사진 뉴시스
▲여야 ‘금융위 해체안’ 공방…이덕원 후보자 “언급 적절치 않아”

▲김정은, 방종 전 미사일연구소 방문…핵보유국 과시·신형 ICBM 개발 시사
▲김병기 “내란특별재판부 필요…더 강력한 3대 특검법 처리할 것”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2030남성 극우화’ 주장, 철회할 생각 없어”
▲송 총리 “스드메 감감이 불공정 여전…소비자 보호제도 보완해야”